
국민과 함께 2020 희망공약개발단

10대 핵심 공약

2020. 3.16.



정 책 위 원 회

10대 핵심 공약

1.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

- 지속되는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사회 조성
- 권역외상센터·응급의료센터 획기적 개선으로 제2의 이국종사태 방지
- 우한 코로나19(국가재난) 대응 위한 안심보육체계 구축

2.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'희망경제'로

-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
- 탈원전 정책 폐기해 안전하고 값싼 전기 국민께 제공
-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
-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

3.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

-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- 기업 설비투자과 R&D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
- 기업승계 가로막는 수탈적 상속증여세제 과감히 개선
-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
- 부동산 보유세 부담 대폭 경감
- 부녀자·7세이상 자녀·어르신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확대
- 혼인·이사·장례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가계 부담 완화
-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폭탄 제거
- 통신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 도입
- 20년 넘은 간이과세 기준을 2020년 상황에 맞게 현실화(소상공인 공약)

4.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

-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보호
- 자사고, 외고, 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하고 일반고의 경쟁력 상향
- 부모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
- 다자녀(3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
- 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

5. 자유시장 내 집 마련

- '내 집 증세'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
- 내 집 마련 꿈 가로막는 대출 기준 완화
-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
-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

10대 핵심 공약

6. 싹 다 갈아엎는, 文정권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

- 문재인 정권 '4대 안보포기정책', '3대 북한눈치보기정책' 폐기
-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
-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

7. 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

-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 조성
-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
- 경찰·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소방장비 교체 예산 2배 확대
-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해 「조두순 방지법」 마련
- 신종 여성범죄 대응 및 1인 여성가구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
- 미세먼지 감축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

8. 공정 희망! 청년 氣살리기

- '조국방지법'을 만들어 불공정 입시 근절과 취업 청탁 및 고용세습 방지
-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
- 청년·신인 예술인들의 '문화마켓'과 '예술인 문화 거리' 조성
-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하여 농업인력 양성
- 청년·신혼부부들의 행복 주거사다리 구축

9. 저출산·고령화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

- 저출산 시대 대비 임신(난임)출산보육 국가가 함께 책임
- 고령화 시대 대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
-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
- 독감 예방접종을 고교생까지 확대 및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

10. 함께 하는 세상!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, 원손잡이 권익향상

-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 마련
- '명절 휴가철 반려동물돌봄쉼터' 지원 강화
- '(가칭) 반려동물 관리기구' 마련과 동물경찰제 확대
- 유기견 입양시 진료비 20만원 지원, 유기견 보호 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
- 반려동물보험료 부담 감소 위한 '반려동물 정책보험제도' 도입
- 원손잡이도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통합당		
정책순위 ①	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	정책분야	보건복지/ 안전
목표	◇ 신속한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으로 질병 관리체계 강화 ◇ 권역외상센터·응급의료센터 획기적 개선으로 제2의 이국종 사태 방지 ◇ 국가 재난 대비 안심보육 대책 마련		
이행방법 및 이행기간	① 지속되는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 사회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-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을 종합관리 -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위해 매뉴얼 정비와 검역 인력 확충 - 감염병 막는 전초기지 역할 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역할과 기능 강화 - 의료기관 격리 및 여행정보력안내(ITS)설치 의무화 -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·설립 -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 -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 연50만원까지 세액공제 실시 - 유아기부터 개인위생 교육 강화 ② 권역외상센터·응급의료센터 획기적 개선으로 제2의 이국종사태 방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권역외상센터의 의사간호사 인건비 단가 인상 - 인건비 지원 전무한 권역응급의료센터(38개소)에 의사와 간호사 각각 20명의 인건비 지원 - 수익이 낮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응급의료기관들 손실보전 대책 마련 ③ 우한코로나19(국가재난) 대응 위한 안심보육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 '긴급 유급돌봄휴가제' 도입 -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뿐 아니라 민간 베이비시터들의 중국 방문 가능성 조사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과 위생관리에 철저 -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가칭 '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' 도입 		
재원조달 방안	○ 우한코로나19 극복 위한 2020 추가경정예산 활용 ○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간수입과 여유자금 활용		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통합당		
정책순위 ②	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'희망경제' 로	정책분야	재정경제/ 산업자원/ 노동
목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◆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◆ 노동시장 개혁으로 짊 막힌 경제혈관 순환 ◆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		
이행방법 및 이행기간	<p>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가지 재정준칙(채무준칙, 수지준칙, 수입준칙) 도입 - 채무한도 초과 시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,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- 사회보험 재정전망 체계를 장기재정 전망의 틀 내에서 일원화 - 국회 발의 입법안에도 Pay-Go제도 적용 <p>② 탈원전 정책 폐기로 안전하고 값싼 전기 국민께 제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탈원전 에너지 정책 폐기,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산업 육성 및 원자력 안전 강화 - 신한울 3·4호기 건설 재개 및 월성 1호기 재가동 - 원전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에 경영자금 우선 조달, 원자력학과 학생들 학업 관련 특별 조치 강구 -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 추진 -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 통해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추진 - 국제공동연구 참여 통해 원전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<p>③ 노동시장 개혁으로 짊 막힌 경제혈관 순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 균형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 -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「고용계약법」 제정 -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(탄력근로제, 선택근로제, 재량근로제 등) 도입 - 대기업 양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 <p>④ 기업과 국민체감도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기구(가칭 '규제개혁처')로 설치 - 'One in, two out', 「행정규제기본법」 개정하여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- 중요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 관리 강화 		
재원조달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탈원전정책을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유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발전기금 등 활용 		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통합당		
정책순위 ③	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	정책분야	재정경제
목 표	◇ 투자 활성화·서비스산업 육성 통해 기업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◇ 시장을 옥죄는 족쇄를 풀어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◇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		
이행방법 및 이행기간	①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- 현행 4단계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, 과표구간별 세율을 2~5%p 인하(2억원 이하 8%, 2억원 초과 20%) -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최저한 세율 조정 (과표 100억 이하 2%p 인하, 과표 100억 초과 현행 유지) ② 기업 설비투자와 R&D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-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, R&D 투자 세제혜택 확대 ③ 기업승계 가로막는 수탈적 상속증여세제 과감히 개선 -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폐지,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·증여세제를 국제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④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- ▲ 7+1 유망서비스업 집중 육성 ▲ 규제 혁파 및 융합 촉진 ▲ 차별 해소 및 창업·세제 지원 ⑤ 부동산 보유세 부담 대폭 경감 -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(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 → 12억원)으로 상향 - 공정시장가액비율 법률에 명시해 정부의 종부세 편법 인상 원천 차단 -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⑥ 부녀자, 7세 이상 자녀, 어르신에 대한 세금혜택 확대 - 부녀자 공제 대상 확대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→ 5천만원 이하) 및 공제금액 인상(연 50만원 → 100만원) - 경로우대공제 상향 조정(연100만원 → 150만원) - 자녀세액공제 2배 인상(인당 15만원 → 30만원) ⑦ 혼인·이사·장례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가계 부담 완화 - 혼인·이사·장례비용의 경우, 각각 100만원 한도로 실제 지출비용의 15%를 세액 공제		

	<p>⑧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폭탄 제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 - 합리적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 도입으로 이중과세 문제 해소 -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해 가계자금의 자본시장 투자 유인 <p>⑨ 통신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 도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무선 전화·인터넷 통신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 도입 <p>⑩ 20년 넘은 간이과세 기준 2020년 상황에 맞게 현실화(소상공인 공약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행 4,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- 영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,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,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
<p>재원조달 방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재정운용계획(19~23년) 계획상의 수입증가분(평균 3.9%)를 활용하여 조세지출주의 사업으로 추진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통합당		
정책순위 ④	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	정책분야	교육
목 표	◇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, 공정 가치 구현 ◇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		
이행방법 및 이행기간	①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보호 -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하는 때는 학생·학부모가 교육감에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‘전학청원권’ 도입 -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여 교실을 정치에 오염시키는 교원의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교단에서 배제 - 학교 내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, 선거공약서 배부, 현수막 게시, 연설·대담, 토론회 등 금지 - 수업연한 조정을 통해 만 18세 이전에 고교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‘학제개편’ 적극 추진 ② 자사고, 외고, 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하고 일반고의 경쟁력 향상 - 자사고·국제고·외고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시도 중단(고등학교의 유형,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) - 지역별 명문고·기숙형 공립학교 집중육성 및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로 일반고 경쟁력을 자사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- 제21대 국회에 ‘(가칭)교육의 힘 위원회’ 구성해 학부모, 교사 등 국민적 합의 거쳐 4차산업혁명시대 공교육 살리는 개혁 방안 모색 ③ 부모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-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% 이상으로 대폭 상향(단, 학생 충원의 어려움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하여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) ④ 다자녀(3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-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확충하여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전면 확대 ⑤ 교육감-시·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- 시·도 교육감과 시·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선거제도 도입		
재원조달 방안	○ 국가재정운용계획(19~23년) 계획상의 예산증가분(평균 6.9%)를 활용 -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		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통합당		
정책순위 ⑤	자유시장, 내집 마련	정책분야	재정경제
목 표	◇ 문정권 사회주의식 부동산 정책으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 ◇ 국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의 대폭 공급 ◇ 1인 가구 · 청년 · 신혼부부 주거희망 사다리 구축		
이행방법 및 이행기간	① ‘내 집 중세’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 -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 세 부담 완화 (현행 시세 9억 초과 →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) - 입법 통하지 않고 꿈수중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저지 - 소득 없이 1주택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재산세 상한특례 확대 ② 내 집 마련 꿈 가로막는 대출 기준 완화 - 상환능력 검증된다면 LTV(주택담보인증비율) 60%로 원상회복(서울기준) -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-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하여 한정되도록 적용 ③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 -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·재건축 규제 완화 - 직주근접과 각종 교육·의료·교통·여가·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 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및 기존 도시(서울 및 신도시 등)들의 스마트 고밀화 전략 추진 - 재건축·재개발 과정에서 페널티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에서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하는 포지티브 정책 도입 - 노후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 재생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-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고 신규주택 공급만 줄어들어 로또 분양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④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-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 등 주택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정책용역 시행 후, 결과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조정 추진 -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역의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에 따른 ‘콘크리트 유령도시’ 제거 방지 - 조합구성 통한 철거권, 공사장식당 운영권,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안전대책 마련 -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재검토		
재원조달 방안	○ 건설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2.5조원(2020년예산상) 활용		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통합당		
정책순위 ⑥	<p>쌉 다 같이엮는, 文정권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</p>	정책분야	통일외교 /국방
목 표	<p>◆ 문재인 정권의 안보포기 정책 폐기</p> <p>◆ 문재인 정권의 북한눈치보기 정책 폐기</p> <p>◆ 자유민주적 통일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추진</p> <p>◆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</p>		
이행방법 및 이행기간	<p>① 문재인 정권의 ‘4대 안보포기정책’ 폐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대 안보포기정책 규정(△ 9.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, △ 대중(對中)3不정책, △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, △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(GSOMIA) 파기·변복 사태) - 9.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및 전방지역 감시 및 정찰능력 강화 -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적인 원상복구 추진 - 3不정책 폐기 위한 국회 결의안 추진 -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(GSOMIA) 공식 연장 추진 <p>② ‘3대 북한눈치보기정책’ 폐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대 북한눈치보기정책 규정(△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, △ 북한인권재단 출범 저지, △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) - 「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 금지법」 제정 추진 -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당연직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의 임명권을 부여하도록 북한인권법 개정 - 북한 인권 범죄 기록 및 처벌 위한 국제적 노력 강화 <p>③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북한퍼주기방지3법’ 「남북협력기금법(개)」, 「남북교류협력법(개)」, 「남북관계발전법(개)」 국회 통과로 굴욕적·일방적 퍼주기 차단 - 남북협력기금 국민 몰래 퍼줄 수 없도록 국회에 견제 장치 마련 -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 폐지하여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의 예산·결산 심사를 받도록 제도 개선 -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 <p>④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 및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 		
재원조달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재정운용계획(19~23년) 계획상의 예산증가분(평균 6.9%)를 활용 -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○ 남북협력기금은 북핵 완전폐기 때까지 규모 축소 		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통합당		
정책순위 ⑦	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	정책분야	국민안전/ 여성
목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◆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 ◆ 위험 근로 공무원 처우개선 통한 사기진작 ◆ 아동·여성 범죄 근절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		
이행방법 및 이행기간	<p>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 조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초등학교 주출입구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 교통 정류장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-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교통관리 경찰관 추가 배치 - 노인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 설치 의무화 -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사용 <p>②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국비로 범죄예방디자인 (CPTED) 5,000개소 신규 설치 -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<p>③ 경찰·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소방장비 교체 예산 2배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찰·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월 20만원으로 대폭 인상 (현행 월 6만원→ 20만원) - 소방복합치유센터(일명, 소방병원) 건립 적극 지원 -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지원예산을 2배로 대폭 확대하고, 기존 분리형 소화전을 일체형 소화전으로 전면 교체하고 신규 설치 추진 <p>④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해 「조두순 방지법」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동·청소년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성범죄자 체류 금지 강화 - 아동·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등에 대한 감경 규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‘주취감경 폐지’ 공론화 - 해바라기센터와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·청소년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지원 확대 		

	<p>⑤ 신종 여성범죄 대응 및 1인 여성가구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데이트폭력범죄 강력 대응을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「데이트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지원 특별법」 제정 - 경범죄(벌금 10만원)로 조치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,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 - 영상협박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- 몰래 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카메라(초소형카메라) 관리제 도입 - 여성1인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‘디지털비디오창’, ‘문열림센서’, ‘휴대용 비상벨’ 등 방범장치 위한 ‘스마트 안심세트’ 지원 - 성범죄자 문자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 - 경찰청 범죄통계 시스템에 ‘여성 1인가구 대상의 범죄통계’ 신설 <p>⑥ 미세먼지 감축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회 전반기에 ‘(가칭) 미세먼지 근절특위’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 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등 국제기구와 협력강화 -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 범위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 100%로 강화 -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강화와 진공·살수청소차 보급 확대 - 공단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는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- 어린이와 학생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하기 위한 실태점검 -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 - 망국적 탈원전 정책 폐기
<p>재원조달 방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재정운용계획(19~23년) 계획상의 예산증가분(평균 6.9%)를 활용 -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통합당		
정책순위 ⑧	공정 희망! 청년 氣살리기	정책분야	청년복지
목 표	◇ ‘조국방지법’을 만들어 불공정 입시 근절과 취업 청탁 및 고용세습 방지 ◇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◇ 청년 1인가구 주거 희망 사다리 구축		
이행방법 및 이행기간	① ‘조국방지법’을 만들어 불공정 입시 근절과 채용 청탁 및 고용세습 방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% 이상으로 상향(단, 학생 층원의 어려움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하여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) –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,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하여 입시 불공정 사례 발생 방지 – 청년이 참여하여 공정채용 감시·감독하는 기구를 당과 제21대 국회에 설치 – 고위공무원 채용 강요행위 등 채용 부정에 대해 엄벌 조치 – 공기업·공공기관의 채용비위 등에 대한 현행 징계시효(3년)규정 연장 –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사용자와의 담합 근절 ②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하고, 유연근로제 확대 – 국회에 9년 발목잡혀 있는 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」 통과로 7+1 의료, 관광, 콘텐츠, 교육, 금융, 소프트웨어, 공유경제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–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 조성 위한 ‘청년스타트업공제회’ 신설 지원 – 성실 실패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과 보증 지원 확대와 적극적 멘토링과 기술인력을 매칭하는 ‘창업재도전지원 위원회’ 구성 – 필요한 만큼 일할 수 있게 주 52시간 예외 적용 추진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,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의 특수성 고려한 근로환경 보장 		

	<p>③ 청년·신인 예술인들의 ‘문화마켓’과 ‘예술인 문화거리’ 조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문화마켓’은 온·오프라인 예술품 전문 유통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청년과 신인 예술가 작품이 활발히 유통될 수 있게 지원 - 전국 주요 기차역, 공항, 미술관, 도서관, 공연장 등에 청년예술인 작품 전시 공간과 메이커 스페이스 등 거점매장 운영과 ‘예술작품은행 설립’하여 청년과 신인작가의 작품 임대 사업 활성화 - 전국 거점별 ‘예술인 문화거리’ 조성 <p>④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하여 농업인력 양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농정착 지원금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월 100만원씩 지급 -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-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금리 현행 2%에서 1%로 인하 - 상속세 감면조치로 청년의 농업 가업승계 장려 <p>⑤ 청년·신혼부부들의 행복 주거사다리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하기 위해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 규모 (85㎡이하) 신규아파트 분양 시, 추첨제 50% 실시 - 청년주택 관련 무료컨설팅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 제공 (컨설팅 → 절차대행 → 입주 등 전 과정 서비스) - 기숙사형(임대), 원룸형·아파트형(임대 및 분양), 단독주택형(세어형) 등과 학세권, 역세권,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주택 공급 - 공급물량 확대 및 민간건설사 분양주택 수준으로 품질 향상과 가전·가구 빌트인 시공으로 부담완화 - 신혼부부 전·월세 임차보증금 80%이내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2억 → 3억원까지 그 외 지역 1억 6천만원 → 2억원까지 상향
재원조달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재정운용계획(19~23년) 계획상의 예산증가분(평균 6.9%)를 활용 -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통합당		
정책순위 ⑨	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촉촉한 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	공약분야	보건복지/노동
목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저출산 시대 대비 임신출산보육 국가 책임 강화 ◆ 고령화 시대 대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◆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 ◆ 독감 예방접종을 고교생까지 확대 및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		
이행방법 및 이행기간	<p>① 저출산 시대 대비 임신(난임)·출산·보육 국가가 함께 책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만 난임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- 임신부 택시비(교통비)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- 우리 아이들이 사용 편리한 아이 눈높이 화장실 만들기 - 양육비 불이행 국가 책임 강화 - 다자녀(3자녀 이상) 국가 장학금 확대 지급 - 독감 예방접종 고등학생까지 무료 실시 <p>② 고령화 시대 대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대상과 종류를 대폭 확대 (대상포진 예방접종과 효과좋은 폐렴구균 13가까지 포함) -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2개에서 4개까지로 확대 - 홀로어르신,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전달하는 스마트밴드 보급 - 어르신 뼈 건강 위해 골다공증 검진 및 치료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-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 -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 신설로 시니어 여성일자리 창출 <p>③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통해 건강보험료를 ‘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’ 되도록 부과체계 개편 -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여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을 국회가 꼼꼼하게 따져 문재인 케어의 속도조절과 국민의 보험료 인상 방지 <p>④ 독감 예방접종을 고교생까지 확대 및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독감 국가 예방접종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 - 학교 건강검진 항목을 거북목, 척추측만증, 비만, 우울증, 시력 등 청소년기에 취약한 질병들에 초점을 둔 건강검진 등 시대에 맞게 개선, 실시횟수도 현재 12년 동안 단 4회 실시에서 8회로 대폭 상향 		
재원조달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재정운용계획(19~23년) 계획상의 예산증가분(평균 6.9%)를 활용 -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○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여유자금 3,100억원 우선 활용 		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미래통합당		
정책순위 ⑩	함께 하는 세상!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, 원손잡이 권익향상	정책분야	보건복지
목 표	◆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 ◆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 ◆ 원손잡이 권익 보호		
이행방법 및 이행기간	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 마련 -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진료비 표준화 규정 -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(성형 목적의 수술 제외) 부가가치세 면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제공 ② ‘명절 휴가철 반려동물돌봄쉼터’지원 강화 -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의 기능을 확대한 지원 강화 ③ 반려동물 기초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‘(가칭)반려동물 관리기구’ 마련과 동물경찰제 확대 - 중앙정부·지자체 산하 전문기관으로 ‘반려동물 관리기구’를 마련 -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증원하고 권한 강화 ④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, 진료비 20만원을 지원하고, 유기견 보호 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 - 유기견을 입양할 때, 10만원의 예방접종 진료비를 20만원(5대접종비 15만원, 반려동물 등록비용 5만원)으로 올려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고, 유기견 보호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 - 반려견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「축산법」 관련 규정 재검토 및 개사육농가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폐업지원 ⑤ 반려동물보험료 부담 감소 위한 ‘반려동물 정책보험제도’ 도입 ⑥ 원손잡이도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 - (가칭) 「원손잡이 기본법」 제정, 원손잡이의 날을 지정(8월 13일)하고, 기초교육기관(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 등)에 원손잡이 인식교육 실시 - 소수자 권익보호 증진 위한 법개정으로 적용 대상에 원손잡이 포함, 원손잡이 실태조사 및 원손잡이용 생활용품 생산에 대한 지원 명문화와 원손잡이용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조치		
재원조달 방안	○ 국가재정운용계획(19~23년) 계획상의 예산증가분(평균 6.9%)를 활용 -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		